

2015

연구보고서-27

I S S U E P A P E R

사회적경제와 여성 고용

수행과제명 • 창조경제와 여성일자리 (II)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사회적경제와 여성 고용*

수행과제명  창조경제와 여성일자리(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충

과제책임자  이택면 연구위원
☎ Tel: 02-3156-7167
✉ e-mail: onbike@kwdimail.re.kr

요약

사회적경제는 창조경제 구현의 전제조건임. 일부 지자체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향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만큼 상당수준의 잠재적수요가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 역시 혁신성과 사회적가치 추구 성향이 강하고 특히 여성 고용 친화적임이 밝혀짐.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숙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창조경제화를 구현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임.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택면·김영옥·이승현·이선행·이해진·이경숙(2015). 창조경제와 여성일자리(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충.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창조경제의 구현은 산업정책적 차원을 벗어나서 개인과 기업, 지역 공동체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조성(creativity)을 진작시키는 조직 차원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함. 선행연구들은 사회적경제의 확대와 활성화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의 착근과 활성화 조건을 탐색하고,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어떻게 주민의 일자리, 돌봄 및 여러 사회적 필요들을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추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
- 또한 이 과정이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참여와 권익 신장을 촉진하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창조경제 및 사회적경제 관련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이 창조경제 착근의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음을 발견.
- 이러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비중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 자료를 동원하여 분석. 그 결과 ①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개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②사회적경제조직과 상당부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이외법인 형태의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③아직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사회적경제의 모든 구성 행위자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제와

법령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노력이 더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각각 확인.

-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증가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산해본 결과, ①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 ②회사이외법인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
- 특히 155개 광역도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경제활동참가율도 높다는 것과, 특히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는 더 큰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고용 및 여성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함.
- 사회적경제는 항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마련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 마포구, 강원 원주시 및 춘천시, 충남 아산시 등 네 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주민들에 대한 표본 조사와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에서 작동 중인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주민조사 결과, 지역별 편차는 다소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지도가 예상만큼 낮은 수준이 아님을 확인함.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비중이나 조직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한 비중은 그보다 현저히 더 낮음. 그러나 향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을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자리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
- 또한 지역에서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중이 높고, 바람직한 사회서비스들 대부분이 지역에 부족한 상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함. 나아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민간 영

리기업이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비중으로 자리잡고 있음도 확인. 또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지도, 제품 및 서비스 이용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고,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 역시 여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 중에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인권신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 조직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사회적기업 중에서 그 비중이 더 낮음.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미션에 있어서 남성대표자 조직보다는 여성대표자 조직이 더 사회적 목표에 정향된 조직운영을 하고 있음을 발견.
- 창조산업에 속하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여러 가지 사회적 미션 수행사업을 수행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미루어,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일수록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같은 모성보호 제도를 시행하는 조직의 비중은 각각 40% 중반 정도로서 일반 사업체에 비해 시행률이 다소 낮은 편이나 일반 사업체에서는 매우 시행률이 낮은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42%와 24.5%에 달했고, 고용형태나 근로시간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일반 사업체 평균보다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응답 대상 사회적경제조직의 지난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1개 조직당 평균 4.9명, 그 중 3.2명은 여성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남. 모든 102개 응답조직 중에서 향후 1년 이내에 유급 근로자 채용(혹은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조직은 59.8%인 61개 조직에 달함. 이로써 조사된 사회적경제조직은 전반적으로 고용잠재력이 크며 비교적 여성친화적인 인력 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지난 1년간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 발상을 이용하여 혁신을 도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직은 전체의 49%로서, 1차년도 연구 결과 파악된 일반 사업체 및 일반 창조산업 분야 영리기업의 혁신 도입 비율보다도 더 높은 수준. 특히 여성대표자 조직은 남성 조직에 비해 혁신 도입률이 더 높다는 것과, 창조분야 조직들은 비창조분야 조직들에 비해 혁신도입률이 더 낮다는 것을 발견.
- 정부 지원 정책 수혜율 면에서는, 인건비 지원 수혜율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¹⁾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지원혜택을 받는 조직이 7.4%에 불과해 정부지원 사업 중 수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짐.
- 전문인력 채용지원 분야를 제외하고 여타 정부지원 수혜에 있어 여성 대표자 기업이 체계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조직은 전체의 17%에 달하나, 여성조직 중에서는 14.3%에 불과. 그러나 나머지 인건비 지원, 세금감면,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설비 및 운영비 용자 등에서는 대표자 성별로 수혜율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여성 대표자 조직의 수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율은 오히려 사회적기업과 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비협동조합 사이에 큰 차이를 보임. 모든 영역의 정부 지원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이 비사회적기업이 아닌 조직에 비해 월등히 수혜율이 높음. 예컨대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65%가 지원을 받았으나 비사회적기업 중에서는 31.5%가 지원받는데 그쳤고 나머지 모든 정부지원 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의 수혜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특히 전문인력 채용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두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중 수혜율은 각각 45%와 25%를 기록한 반면 비사회적기업 중에서는 9.5%와 2.4%에 불과해 가장 큰 차이를 드러냄.

1) 이후 정부사업 수혜율 수치는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조직은 제외하고 산출된 것임.

-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과 비협동조합을 비교해보면 비협동조합이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받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정부지원을 더 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에서만 유일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수혜율이 33%로 비협동조합의 수혜율 26%보다 더 높을 뿐, 다른 모든 지원사업 영역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비협동조합에 비해 수혜율이 현저히 낮았음. 이는 현재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정책이 인증 사회적기업에만 편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
- 한편 앞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사업비 지원을 받기 원한다는 응답비중이 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비 지원(43.1%),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42.2%) 순으로 나타나, 운영 및 사업경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3 정책제언

제안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제안

■ 정부의 행정 인프라 개선

- 비록 제한적으로나마, 앞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과 체계를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각 사회적경제조직을 총괄하여 관할하는 추진체계가 없어 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 지원 행정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

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의 역할과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각각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여타 특별법에 기반한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은 각 법률의 소관부처에서 각각 관할하도록 돼있는 현재의 중앙부처 추진체계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지원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다하기 어려움. 조속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소관 부처를 지정하고 그에 걸맞는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의 추진체계가 이처럼 중첩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자체 전달체계 또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단위에까지 사회적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전담 조직과 기본조례 성격의 법제가 갖추어져 있는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정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등)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와 조직만을 갖추고 있을 뿐 사회적경제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과 법제를 미비하고 있고,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전담 조직 없이 부서 내 담당자 1인이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 그러므로 지역 시도 수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두고 모든 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일괄 담당하게 할 것인지 혹은 조직형태나 기능에 따라 기존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총괄 및 조정기능을 하는 조직을 별도로 둘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임. 선행 연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모든 종류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행정을 일원화하여 단일한 전담 조직과 기본조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본 연구의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나 공무원 조직이 사업이나 생산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4개 조사지역 중 아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가장 긍정적인 응답경향을 보여준 것은(본문 369쪽), 세

조사지역 중 아산시가 유일하게 사회적경제 전담과(경제환경국 사회적경제과)를 두고 있고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 또한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를 늘려 기초자치단체 밀착형 중간 지원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광역단위에 집중 설치돼 있지 않은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기초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사회적경제가 작동하는 공간은 마을, 공동체 등 주민과 매우 밀착된 생활권 역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간 지원 조직의 서비스 말단은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최소단위에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광역을 커버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 할지라도 실제 지원 업무에서는 기초단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

■ 정부 재정지원의 방향 전환

- 현행 인건비 지원 등 직접적 재정 지원으로 치우친 정부 역할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 및 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 재정 지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생태계 조성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개별 조직 단위의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에서 탈피하여 복수의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컨소시엄이나 협업 프로젝트를 단위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개별 조직에 대해 특정 요건을 전제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개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서로 정부 지원을 위해 경쟁하게 만들으로써 공유와 연대를 핵심 원리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저해할 수 있음.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성장 등을 정책목표로 하는 초기 지원 방향으로

는 적합할 수 있으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과 생태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는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단임.

- 따라서 인건비를 비롯한 재정 지원을 할 대상을 개별 조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조직 간의 컨소시엄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적절한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 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모두 포괄하는 전후방 연쇄 사업(예컨대 원료 생산 조직, 중간재 생산 조직, 물류 조직, 완제품 생산 조직, 판매 및 유통조직을 모두 포괄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정부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각종 금융, 세제, 교육, 컨설팅, 인건비, 사업비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전문적 자문 네트워크 활성화와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이 필요한 혁신 역량과 경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및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와 프로보노 활성화를 제안함. 우선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계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응답 조직들 중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의 비중이 타 조직과의 연계협력 비중보다 더 낮은 것을 고려, 이들 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요청됨. 특히 창조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비창조분야에 비해 혁신활동 수행 비율이 더 낮은 것을 감안,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대상으로 혁신적 수익모델 발굴 등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문가 집단의 프로보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전문적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행 프로보노허브(<http://probonohub.org/>)와 같은 공공 포털의 확충과 더불어, 프로보노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프로보노의 재능기부를 유인할 물질적·비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 사회공헌 차원에서 임직원이거나 전문직의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프로보노 자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비영리 영역의 사업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한 니즈를 가지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그것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프로보노를 적절히 매칭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이므로 프로보노 매칭을 지원해줄 프로보노가 필요. 따라서 프로보노 매칭을 포털 관리자 등 비전문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매칭을 위한 프로보노 풀을 별도로 구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자금조달 시스템 및 금융시장 형성

- 현행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자금 지원 시스템과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금융 및 자금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 자격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잦은 현실을 감안하여(오창균 안지민, 2013: 10), 획기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지원 및 운영과 성장을 위한 금융시장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금융의 제도적 개편을 통해 마리크로 크레딧 사업을 확충하고, ‘사회적 담보(social collateral)’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이들 제도는 빈곤층이나 여성 창업자 등에게 전통적 의미의 담보 없이 자금을 대부해주면서도 대출자금 회수율을 높여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의 사회적기업인 그라민 은행이 고안해낸 제도로써, 저소득 빈곤층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영사업체 창업자금을 대출해줌에 있어 매우 낮은 이자율 적용과 아울러 5인 이상의 대부자를 그룹으로 조직하여 채무 이행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한 것임. 즉 5인 중 1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4인이 공동으로 그 1인의 채무를 변제케 함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담보가 아닌 대출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담보로 설정.

- 현재 마이크로 크레딧은 주로 저소득층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고 사회적가치 평가에 입각한 자금조달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자체(예컨대 충청남도)에서 계획 중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부처(예컨대 기획재정부 등)가 사회적경제 기금 관리주체가 되며, 출연 주체 중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영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 기금의 운용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성장 단계별로 보조금(grants), 대부(loans), 투자(investments) 등 다양한 형태의 운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 양성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한 신봉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사회적경제조직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을 포함,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고 경영할 역량을 갖춘 인재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할 역량 있는 종사자를 발굴 육

성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현재 사회적기업 진흥원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경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여러 종류의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가 운영 중.

- 그러나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교육에 집중돼 있고, 사회적경제 전반과 여타 사회적경제조직 일반에 대한 포괄적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 한편 지자체 수준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비롯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들은 그 범위나 깊이에 있어 지역 여건별로 다양한 편차를 보여 표준화된 일정 수준 이상의 벤치마킹 교과과정이 부족한 실정.
- 따라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전반과 모든 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기초교육과, 현직 대표자 및 관리자뿐만 아니라 현직 근로자, 장차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을 원하는 일반인,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하고자 하는 구직자, 일반 시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여 표준화된 교과과정에 덧붙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모듈식 지역특화 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함.
-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의 인식과 소양 또한 중요하므로, 사회적경제 관련 교과과정을 공무원 교육과정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교육프로그램 및 교과과정을 개발하면서 성차를 고려하고 성별 스테레오타입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경제 지도자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체계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안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여성 고용 개선 방안 제안

-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성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크고 사회적경제조직에서의 일자리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은 여성이 대표자로서 경영을 담당하기에 더 친화적인 조직이며,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하고 여성이 일하기에 더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는 영리추구적 민간 기업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데 많은 장애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대안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성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적인 정부 지원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경제부문에 여성이 경영자로서 혹은 근로자로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분야에 특화된 창업 및 취업 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

■ 여성의 사회적경제 분야 진출 지원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장 지정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형 새일센터 이외에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등 특화형 새일센터를 신설하여 추가지정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사회적경제조직에서의 일자리는 근로시간의 유연성, 작업과정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여성에게 매우 친화적인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1인 창업이나 소자본 창업의 위험과 어려움을 사회적경제조직을 창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에 공헌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또한 여성들이 적극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일부 새일센터를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지원 및 여성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특화형 센터로 지정, 기존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유형의 교육훈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혹은 기존 새일센터의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부문에 새로운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적경제 분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전문 취업설계사 등)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되는 센터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서울남부여성새일센터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하나인 모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창업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취업설계사 배출, 직접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분야의 창업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익모델 발굴 등을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이와 같은 협력 사업을 파일럿 사업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분야 여성인력 진출을 지원할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여성 특화 프로보노 활성화

- 여성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해소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사회적경제분야 진출을 지원할 방안으로서 여성 사회적기업가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 여성 대표자 대상으로 특화된 프라보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
-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나 차별을 겪고 있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았음.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여성대표자 조직이 남성대표자 조직에 비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음. 가장 뚜렷하게 여성대표자 조직이 조직 설립이나 경영상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

가 있다면 그것은 전문인력 활용 등 외부로부터 경영이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구하는 영역이었음.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기 용이하다”에 대해 남성 대표 조직은 5점 만점에 3.13점으로 동의에 치우친 응답을 보였으나 여성 대표 조직은 3.0점으로 중립적인 응답을 보였음. 또한 정부 지원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대표 조직의 수혜율이 낮은 제도가 전문인력 채용 지원 제도였음(남성대표 조직 수혜율 17%, 여성대표 조직 수혜율 14%).

-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여성 특화 프로보노 사업을 제안. 현행 프로보노 지원 사업은 대체로 커버하는 자문 영역이 여성이 주로 진출하는 사회서비스나 돌봄 및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영역들로 구성돼 있음. 결국 현행 프로보노 사업은 여성이 주로 진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중사분야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문영역을 주로 커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프로보노의 인적 분포 역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돌봄,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특수하게 필요한 자문 영역을 추가하고, 여성 전문가를 프로보노 풀로 확보하면서, 여성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자 및 경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특화 프로보노 사업의 추진을 제안함.

4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과 공생의 생태계가 구축되어 지역 수준의 공유·연대경제 체제 확립.
- 혁신의 원천인 연구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존과 성장 촉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의 혁신성 증대, 지역사회 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자금조달 창구 활성화로 사회적 투자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기업의 양적 증가와 질적 성장 가능.
- 사회적 문제의 발굴과 그 해결 방안을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와 지도자 양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확대 재생산 가능.
- 기존 영리 사기업 부문에서 고용상 각종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과 취업 기회를 향유하고 직업적 성취를 축적함으로써 노동시장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실현.

참고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http://gwcs.or.kr/>

<http://sechungnam.org/>

<http://sehub.net/>

<http://www.coop.go.kr/COOP/main.do>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국내외 연구>

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엄한진·권종희. 2014. “대안운동으로서의 강원지역 사회적경제 - ‘연대의 경제’론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4: 358-392.

Baldwin, A., 2009, "Creativity, Social Benefit and Job Creation: The Potential for Social Entrepreneurship in Ontario", Martin Prosperity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Ontario in the Creative Age, 2009-WPONT-003

Davis, S., 2002, "Social Entrepreneurship: Towards an Entrepreneurial Culture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Youth Employment Summit, Sep. 2002 <https://www.ashoka.org/files/yespaper.pdf>

European Commission. 2013.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repreneurship.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EESC), 2013, The Social Economy in the EU.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관계부처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여성인력개발과
